

계속기업가치 2.5조·청산가치 3.7조 … ‘인가 전 M&A’ 추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 발표
청산가치 1조2000억 높게 판단

홈플러스, 관리인 의견서 제출 계획
“인가 전 M&A 성공시 정상화 가능”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의 기로에 섰다. 삼일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할 방침이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홈플러스 본사에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 더 크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 약 3조 700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2조



경기 고양시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사진

/뉴시스

5000억원보다 약 1조 2000억원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배경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 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총 3가지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내달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한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내달 10일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인수합병 완료 후로 연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인수

합병이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 인수를 통한 신규자금 확보로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홈플러스는 법원 주도로 자산이 정리되는 등 청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보고서와 달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은값, 13년만에 최고치

트럼프발 관세 정책 이후 금값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금 대신 은·백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36.26달러(4만8000여원)에 장을 마감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금 선물 가격 역시 전날 온스당 1254.5달러(170만원)에 거래를 마쳐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두 금속 모두 이달 들어서만 10% 이상 올랐다.

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도 급격히 늘어났다. 6월 현재까지 300톤 이상이 거래됐는데 지난달보다 2배 많아졌다. 백금 기반 ETF에는 올해 들어 7만 온스 자금이 유입됐다.

은·백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금값이 지나치게 고평가 됐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 이후 안전자산이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금을 헤지 수단으로 활용했고, 금값은 역사적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에만 25% 이상 치솟았다.

스탠다드차타드의 귀금속 애널리스트 수키 쿠파는 “은과 백금이 금을 따라 잡는 흐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금과 달리 은과 백금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은 납땜, 태양광 패널 같은 제조 공정뿐 아니라 배터리, 유리 코팅에도 활용된다. 백금은 휘발유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뉴시스

» 1면 ‘트럼프 이달 중…’서 계속

각국에 의사표현 요구 일각선 명분쌓기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또 15개 안팎의 국가와도 협상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150개국 이상(의 상대국)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상대국은 (계약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송 시점은 “1주 반(열흘) 뒤 내지 2주(보름) 뒤”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문의 초안 형식을 빌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전 세계에 띄우겠다는 얘기다.

서한을 받은 상대국은 이대로 따르거나,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협상 연장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수의 상대국들은 뒷집지고 있는데 90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서 곤장 고을의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일대대 대응’ 중인 미국만 홀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협상이 개시됐을뿐더러 한국의 경우 최종 서명을 맡을 정권이 이제 막 생겨났다. 미국으로선 굳이 7월9일 시한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분별한 가맹사업 막는다… “예상매출 매년 제공해야”

박정훈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 규제 등 담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기반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가 갑질 논란과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에 휩싸인 가운데,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을 제한하고 예상매출산정서를 매년 점주에게 제공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날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 규제와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연도별 제출 의무화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

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세수입 증가에도 나라살림 적자 여전… 1월~4월 46조 ‘핑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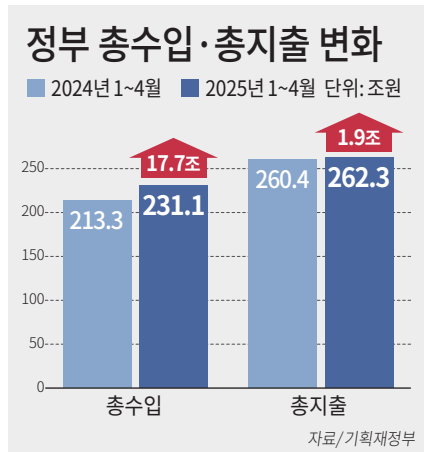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채무 1200조 근접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달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3번째로 컸다. 세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누계기준으로 2024년과 2020년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인 46조 원대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7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



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조8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치 흑자(14조8000

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 1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18조5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1~4월(64조6000억 원)과 2020년 1~4월(56조60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다만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는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13조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3조5000억 원 늘었다. 교통세

(5000억 원)와 관세(3000억 원)도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6000억 원)와 증권거래세(-8000억 원) 세수는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감소한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 원으로 1200조 원에 근접했다. 국채 잔액은 1196조5000억 원, 차입금은 1조 2000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